

2003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70
----------	----

제안년월일 : 2002. 2. 13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어려운 농정 현실속에서도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정책은 부단히 발전하여 왔으나, 금번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발표에 대하여 전 도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큰 실망감에 휩싸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제안 이유

- 지난 2. 4일 정부가 WTO 제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국회에 상정한 것은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업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어 전 도민과 함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의견의 제시와 국회에서 정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코자 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2003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기획예산처장관, 농림부장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대표)님께

금년은 '참여 정부'의 기치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크고 중요한 한해로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격동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50만 충청도민들은 신정부 출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개발을 물론 우리민족의 생존 근간인 농업의 현안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 4일 정부가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청도민과 함께 농촌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추곡약정수매가 2%이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모든 국정현안이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어느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검증절차 없이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은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400만 농민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추곡수매가 2%이하 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압박시키는 요인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는 쌀농업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추곡수매가 2%인하에 따른 재원을 논농업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에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대한 정책의 제시나 대책도 없이 정부수매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쌀재협상의 모든 문제를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쌀 소득은 전체 농업소득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의 모든 난제를 푸는 첩경이며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 구축, 쌀소비 확대 및 재고대책, 생산성 향상 등 쌀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정부는 WTO, FTA, DDA협상에 따른 근시안적인 대책에서 탈피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제의 개방은 피해갈 수 없어 정부는 그동안 WTO, FTA, DDA 등 국내농업에 민감한 국제협상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농업정책이 되지 못했다고 볼 때 농촌경제는 피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황폐화 되어 가는 농촌을 희생시키고 농촌경제를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쌀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민심을 헤아리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 400만 농민과 함께 이의 이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150만 도민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추곡수매가 인하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400만 농민의 생존 기반과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2003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정부(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2003년 2월 13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